

위라벨 확산에 발 벗고 나서는 경총

경총, 일·생활 균형 기업 간담회 시차출퇴근 등 저출산 지원제 시행

경제계가 일과 생활균형(위라벨)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선다.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먼저 일과 과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 열고,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정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T&G와 풀무원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

KT&G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후가 후 별도 절차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휴직자 업무 복귀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은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연계해 1년 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 사용토록 한 '자동육아휴직제', 복직 1개월 전 해피콜·시차출퇴근제 등 육아휴직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정책브리핑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왼쪽)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한국쌀 원조 추진현황 논의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UN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쌀 원조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와 WFP 사무총장간 양자 면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3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세계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와 WFP간 이어오고 있는 협력관

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10일 군산항에서 개최된 식량원조 출항식에 참석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쌀이 현지 수혜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WFP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데이비드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지속적인 식량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WFP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싱가포르와 산업·에너지 등 협력

백운규 장관 2일간 현지방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산업·에너지·통상·무역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장관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ASEAN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백 장관은 우선 이날 찬 춘싱(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LNG 등 에너지 협력,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장관은 바이오·헬스, 전기·

자율차 등 한국의 5대 신산업 중심 혁신 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비전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임에 공감하고 4차 산업 기반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스마트그리드(에너지자립성 등) 등 에너지 신산업, LNG 협력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과 관련해 백 장관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연이은 회담 성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성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AI 기술개발에 2.2조원 투입

4차 혁명위, AI R&D 전략 의결 공공분야 대형 AI프로젝트 추진 고위험·차세대 중장기 투자 병행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 의료, 안전 등 공공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투자로 우리나라가 2022년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6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인공지능(AI) R&D(연구개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하지만 AI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두루 발전돼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대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 지원도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R&D 및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행할 계획이다. 신약, 미래소재 등 타분야와의 융합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탐색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개발주기를 15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뇌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AI 기술을 개발할 인재도 양성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대학원을 2022년까지 6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학연구센터에 AI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 연구인력 1400명과 제품·서비스 창출 인력 3600명 등 총 5000여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분야에 협력형 연구기반도 조성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학습용 데이터 1억6000만 건과 한국어 말뭉치 152억7000만 어절을 AI 허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5호기에 AI 전용 자원을 할당, 2022년에는 400여 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대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전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월드클래스 기업 41곳 선정... 해외진출 지원

산업·중기벤처부, 총 300곳 선정 신규 선정기업 평균 매출 1169억 기존 지원기업 6년간 매출 16% ↑

정부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위한 R&D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인력·지식재산권(IP)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포함될 41개사를 새로 선정하고 서울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선정서를 수여했다.

지난해까지 259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한 정부는 이번에 41개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목표로 했던 300개사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1개 기업은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30개사로 평균 매출액 1169억원, R&D 집약도 5.3%, 수출 비중은 53.1%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가 11개사(26.8%), 자동차 9개사(22.0%), 전자·통신 5개사(12.2%), 의료·광학기기 5개사(12.2%) 순이다.

그간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들은 R&D·수출·금융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11년~2016년 간 매출액은 15.8%, 수출은 17.4%, 고용은 14.9% 증

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2016년까지 종료된 과제 46개 중 3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해 총 1조 800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해 1133억 원의 지원 예산 대비 약 16배의 성과를 이뤘다.

실제 2012년 선정된 보일러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그린홈 구현을 위한 가정용 초고효율 에너지기기 기술'을 개발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은 2012년 3414억원에서 지난해 5698억원으로 67% 증가했고, 수출액도 1120억원에서 2693억원으로 140%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정유라 입학·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최서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최순실 씨. /연합뉴스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취득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정

전 이화여대 총장에 징역 2년 전 입학처장에 징역 1년 6개월

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중 기자 joker@